전속고발권 폐지 공청회 찬반 '격돌'

"검찰과 협력 구축해야 불공정거래 신속구제" VS "검찰 직접 개입 시 기업활동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정무위원 회에서 20일 열렸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사건이 적게 처벌 됐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이 공정거래사건에 직접 개입할 경우 기업 활동이위축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김남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전 속고발권은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따 르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폐지해야 한다고 각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정책기획 부서이므로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매년 주요 분야 를 정하고 기획에 따라 필요한 사건 의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고된 사건을 1차로 공정경쟁 조정원에 보내 조정을 거치게 하고 있어 조사를 마치는데 1년이 넘는 경 우가 많다"며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 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 등의 경우 에는 실효성 없는 구제제도가 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신고 후 무혐의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매년 늘어나 149일, 129일, 2013년 245일, 2014년 215일, 2015년 240일 등이 걸렸다. 반면 검찰은 고소사건에 대해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문제는 '과잉 범죄화'가 아니라 '과소 범죄화'라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적은 수의 사건만이 형사화 되고 그나마 미약하게 처벌되고 있었다"며 "검찰의 기업수사 관행 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과잉수사할 것이라는 점도 우 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으로 기업활동의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속고발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은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 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 라며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형사 처 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 다"고 했다.

이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과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고도의 경제 분석과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고발요청권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시원장·조달청장·중 소기업청장의 전문성과 예산 부족으로 고발요청권 행사가 미진하다면, 이들 기관의 전문성과 예산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중기중앙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개 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지난해 은행 예 · 적금 35.7% 중도해지

전년대비 1.3%p 증가

지난해 은행 예·적금에 가입한 소비자 3명 중 1명 이상은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은행 예·적금 중도해지 비율 은 35.7%로 1년 전보다 1.3%포인 트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정기예금보다 매월 붓는 적금의 해지율이 높았다. 적금을 깬 비율은 2014년 41.7%, 2015년 38.7%, 지난해 40.8%선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최근 증가폭은 정기예금 이 컸다. 정기예금 중도해지율은 2014년 28.3%에서 2015년 30.8%, 지난해 33%로 매년 2~3%포인트 늘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황으로 목돈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서민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금

리 기조로 예·적금 금리가 낮아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수요 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에서 보장한 예금 이자율을 챙길수 없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만기 이자율보다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은행권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치한 원금 중 일부를 찾을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안내했다.

특판 상품 등 일부는 해지가 불 가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횟 수를 1~3회로 제한한다.

다만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당보대출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음성 OTP 대리인 발급 가능"

비조치의견서 58건 결과 회신

앞으로 금융권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장애인의 음성 일회용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대리인에게 발급해도 된다.

또 여신전문회사 대손인정대상 채권 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상품 운용 관련 '투자자문 업체'가 자문해주는 행위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비 조치의견서 요청 83건 중 대상과제 58 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며 이 같

비조치의견서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이 밝혔다.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 매체의 신규·교체를 희망할 경우, 인 감날인 위임장 등 대리권이 대리인에 게 수여되면 이 자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렌탈채권이 기한이익 상실 등 사유에 해당돼 해지된 경우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 우 대손인정 된다.

지문업 인가를 받은 투자지문업체로 부터 일임형 ISA상품의 운용에 대한 지문을 받는 것은 일임업자가 일임재 산운용과 관련해 투자 지문을 받는 것이므로 가능하다.

단 투지일임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 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 는 행위는 금지다.

신용카드 겸업은행이 고객들로부터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보 험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것은 겸영업무 신고대상인 신용정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뉴시스

제2금융권 · 여신금융전문회사 대출 조인다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 은행 수준 '강화' …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지난해 대출 자산이 급증한 저축은 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 전성 감독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면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져 대출 증가 속도 가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 화된디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지산을 정상 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앞으로는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되고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 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된 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해 금융사는 대출 심 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자산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는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다만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금융 사의 부담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0 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사와 캐 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 성 규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의 경우 고정이하 채권 비율이 가계대출은 연체 3개월 이상, 기타여신 자산은 6개월 이상으로 은행권보다 느슨하다.

급감원 관계지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잠 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KT, 4년간 ITU '5G 국제표준화' 주도

 KT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4

 년간 '5G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KT는 ITU 표준화총국에서 5G 표준

KT는 ITU 표준화종국에서 5G 표준화 전담 그룹인 'MT-2020 워킹파티'가 신설되고, 의장으로 KT의 김형수박사가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IMT-2020 워킹파티 신설은 지 난 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에서 개최된 ITU-T 제13연구그룹 정 기총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그룹은 향후 4년간 운영되는 정규조직으로, KT 김형수 박사와 텔 레콤 이탈리아(Telecorn Italia)의 루카 페산도(Dr. Luca Pesando)가 공동 의장 으로 선임돼 ITU-T의 5G 기술표준화 를 총괄하게 됐다. /뉴시스

